

일본인 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

한국근현대역사기행

식민지 사회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?

- 식민지근대화론 vs 수탈론 해결 방안 모색
- 도리우미 유타카, "일본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"
한국 역사학계가 쓰는 '수탈'의 의미부터 재정리할 필요성. 즉, '수탈='강제로 빼앗음' 논리로는 '식민지 근대화론'을 반박할 수 없다는 주장. '일본인도 납득할 수 있는 반박 논리를 만들 것'
- 기존연구에서 토지조사사업으로 땅 수탈 주장하나,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토지의 '직접적' 수탈은 없었고, 쌀 수탈 역시 2차 세계대전 중 강제 공출 이전에는 경제적인 거래, 즉 '수출'이었음 주장

식민지 사회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?

- 일제의 '수탈'은 없었다지만, '불공정 시장'에서 '부당이익'을 취한 것
- 쌀도 어쩔 수 없이 싸게 팔도록 하고 통계를 통해 그 문제 감춘 것
- 미면교환체제: 개항 이후 조선 쌀의 일본 수출 확대. 일본의 기계제 면포 수입 구조
- 1876년 개항 이후 쌀, 잡곡의 무제한 수출. 일본 상인의 입도선매, 궁박판매.

식민지 사회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?

- 수출품(쌀 콩 금 우피) 수입품(섬유제품)
- 일본 자본주의 성립을 위한 원료 창고+상품시장화. 일본 신흥공업 지대 저임금 노동자의 값싼 식량 창고이면서 자본제 섬유제품의 시장화
- 미곡 유출은 소빈농층의 몰락(동학농민군의 반일), 동시에 지주계층의 부 축적 계기(개화파의 지주중심 근대화론).
- 일제하 식민지 지주제 형성(일본인 지주, 조선인 지주)

식민지 사회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?

- 일제하 지주 계층: 식민지 무역을 이용, 일본 제국주의와 공통의 이해관계. 총독부 농공은행의 금융대부. 지주식 기업가 등장
 - 일제하 농민생활상: 77%가 자,소작. 고율소작료+경제외적 강제. 근대적 소작 계약, 비료대 등 부담. 1920년대 소작쟁의
- => 빈농층 해외 이민(1917-27년, 도일 인구 67만, 하와이, 간도, 연해주 등 이민)
- 김유정의 단편 소설 '솔'(1930년대 강원도 화전민의 궁핍상)

식민지 사회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?

- 쌀값 통제의 사례(도리우미 유타카)
 - 식민지 조선과 일본의 쌀값 차이. 시장가격과 상관없이 공동판매장에서 부당하게 싸게 매입, 수출 강제
- 조선인의 저임금(일본 노동자의 1/4)
 - 공식 통계치(인건비 책정)와 차이 및 미지불 등
 - 도일 노동자, 만주, 간도, 시베리아 이주자 급증(60만~200만)

〈표 4-1〉 1928년 재조선 일본인과 조선인의 인구와 우편저금 잔고

	일본인		조선인		합계
인구	469,043명	2.45%	18,667,334명	97.55%	19,136,377명
우편저금액	26,481,546엔	86.01%	4,305,957엔	13.99%	30,787,503엔
1인당 저금액	56.46엔		0.23엔		
조선인 기준 저금액 비율	244.76		1		
1인당 추정 은행 예금 잔고	442.87엔		1.80엔		

출전 朝鮮總督府,《朝鮮總督府統計年報》昭和二年, 1930에서 산출.

이것을 보면, 인구의 겨우 2.45퍼센트인 일본인이 우편저금의 86퍼

식민지 사회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?

- 식민지 조선인과 재조선 일본인의 자산 비교
 - 1928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
조선 내 일본인 1인당 우편저금액 56.46엔
vs 조선인 1인당 0.23엔
 - = 식민지 조선 인구의 2.45% 일본인이 우편저금의 86% 차지(조선인의 245배 많은 자산 소유)

식민지 사회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?

- 식민지 조선인과 일본인간 압도적 자산 차이의 원인 규명

=> 수탈, 착취 or 부당 이익?

=> 일본 정부가 조선에 '불공정한 시장'을 만들고 일본인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결론

"쌀의 경우 시장에서 지주들의 경쟁체제가 아니라 '어쩔 수 없이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구조'를 형성, 헐 값으로 수출"

"총독부의 재정, 금융제도를 통한 개입"

* 방직업계의 경우 경성방직보다 일본업체들이 조선총독부 지원을 더 많이 받은 것(저리대출)

식민지 사회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?

- 토목 청부업자 사례를 통한 식민지 조선 경제 발전의 허상

- 철도 건설 등 식민지 조선에 근대화가 진행되었음에도 왜 조선인들은 가난했을까? 식민지 근대화론자(이영훈 외, 『반일종족주의』 미래사, 2019)들은 일제 통치가 경제적으로는 조선에 도움, 조선의 빈곤 책임은 전통사회에 있다고 주장

<= 철도, 수리조합사업 등 총독부 재정으로 조선 경제의 인프라 구축 시 일본인 토목 청부업자들이 총독부와 유착, 많은 이익을 취하고, 경인 경부철도 공사에서 보듯 조선인 청부업자들은 배제

식민지 사회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?

- 통계 수치의 신뢰도

- 일제 강점기 통계 문서들을 신뢰하는 식민지근대화론자

ex 강제징용 조선인 탄광부의 임금이 상당히 높았다는 주장(이영훈 외, 『반일종족주의』 미래사, 2019).

- <- 조선총독부 통계 자료 vs 체험담, 수기, 신문 보도
- 자료 수치상 드러나지 않는 총독부 권력의 간섭이나 청부업자들의 폭력적 저임금 구조 확인 필요